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11/23 통권 159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소리없는 고객의 함성을 듣는다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비상장법인의 상속·증여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쟁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 결과
-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일정조건 성취시 반환의무가 있는 지분이라도 일단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임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대표이사과임원 급여 등의 지급과 손금산입 가능성〉

개념구분		지배주주 임원	일반 임원	근로직원
기본급여	규정범위	손금산입	손금산입	근로대가는 전액 손금산입
	규정초과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상여금	규정내	손금산입	손금산입	손금산입
	규정초과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이익처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특근수당 등	규정내	타당한 소액 불가피한 경우 손금	좌동	일반적인 임금금액 (손금)
	비규정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실지급 손금산입
퇴직급여	한도내	외부 DC형 불입손금	좌동	타당액 (손금산입)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업소득(정당대가)		퇴직처리 후 특별실적 성과급은 손금가능	좌동	손금산입 (실적대응)
기타소득(정당거래)		대표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상 권리 양도대가 가능	좌동	사례없으나 손금 가능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98호 / 주간 47호

2022. 11. 23. (수)

· 발 행 인 : 이 윤 언
· 제 작 :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대표이사과 임원 급여 등의 지급과 손금산입 가능성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비상장법인의 상속·증여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쟁점	2
C E O 에 세 이	CEO는 소리없는 고객의 함성을 듣는다	5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유상감자 한도 - 식비 비과세 - 외화 채권회수 -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7 8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9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세법개정 - 주요 5개 선진국과 한국의 R&D투자세액공제 개요	11 12
직 장 인 Survival	말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진다	13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법규소득-4441, 2022.05.25)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 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사전법규소득-537, 2022.05.17)	14 15
세 정 뉴 스 와 해 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16
마케팅 Tax consulting	일정조건 성취시 반환의무가 있는 지분이라도 일단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임	14
세 무 정 보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지방세·지방행정재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7 22 29
회 계 정 보	-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34 40 45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21

비상장법인의 상속 · 증여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쟁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계산방법, 산식, 주의점, 쟁점
일반적인 계산방법		1주당 자산가치 × 40% + 주당순손익 환원가치 × 60% (부동산 과다 법인은 6:4)
1주당 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의 법인의 순자산가액 (= 세무상 자산 - 부채) ÷ 발행주식총수 (평가기준일 현재이므로, 상속 · 증여일로 가결산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함)
손익 환원 계산 주의점	1주당 손익환원가치	(최근 1년 세무이익 × 3 + 최근 2년 이익 × 2 + 최근 3년 이익 × 1) ÷ 6 × 10배 (이익율 10% 환원 적용)
	각 년도 세무소득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 (= 세무이익)은 과거 이월결손금 차감공제 전 소득임
	법인세 등은 차감	이월결손금 차감 전 각 년도 세무이익에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을 곱한 금액임
	3년 순손익액 계산	평가기준일 이전이므로 확정결산된 만 1, 2, 3년의 세무손익 반영함 (가결산 안함 : 재산세과 - 498, 2010. 7. 7.) (22년 12월말 법인의 22년 12월 31일 증여이면 만 1년인 22년 포함, 22년 12월 30일 증여이면 22년은 만 1년 아니므로 불포함)

◎ 비상장주식의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이므로 그날까지 가결산하며, 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므로 해당일 포함 만 1년이 되는 확정결산사업연도임.

(2017-법령해석재산-0698, 생산일자 2017. 11. 1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 질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 답변 내용

개인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손익은 가결산 안한다는 해석)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추가 해석>

○ 서면4탐-263, 2006.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12. 31일 이전이므로 12. 31일 포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탐-499, 20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12월 30일 이므로 2006년은 불포함)

○ 대법원2008두4275, 2011.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20, 2015.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어디까지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역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이 ‘12. 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라 할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3450, 2016.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CEO는 소리없는 고객의 합성을 듣는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고객의 소리를 전하는데 CEO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한다. 1985년 12월6일, 중국 하이얼(海爾)전자그룹 장웨이민(張瑞民)총재는 공장 작업장에 전체직원회의를 소집했다. 분위기는 침통했다.

작업장 앞쪽에는 모두 76대의 갓 출고된 냉장고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각 냉장고 앞에는 대형 첼퇴가 한 개씩 있었다. 장 총재는 간단하지만 힘찬 훈시를 몇마디 한 다음 곧장 옆에 놓여 있는 첼퇴를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아이보리색이 선연히 반짝이는 새 냉장고를 땀다 부수기 시작했다. 사원들도 각자 첼퇴를 집어들고 나머지 75개 새 냉장고를 때려부수었다. 그 냉장고는 모두 품질조사 결과 불합격품이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하이얼 12.6 냉장고 파괴사건’이었다.

첼퇴의 일격은 고객의 소리없는 합성이었다. 그 합성으로 하이얼의 각종 가전제품은 2001년도 모든 중국제 브랜드가치 중 제1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톱 브랜드로 응비했다.

소리없는 고객 합성의 전달자

그래서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되고 12개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중인 하이얼의 브랜드 파워는 세계 최강이 되고있다. 이 중국 톱 브랜드의 사훈은 다름 아닌 신용과 정직이다.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를 명쾌히 정립한 경영철학이 아닐 수 없다. 하이얼은 독특한 품질 보증시스템을 운영하며 최고의 서비스로 국내외 소비자의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고객 중심철학이 조직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실천적 과제가 있다.

첫째, 조직체계 속에서 마케팅 부문이 여타 조직보다 앞서 움직이거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판매관리 차원을 넘어 시장과 호흡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펄펄 살아 움직여야 한다.

둘째, 분산된 조직 체계로부터 통합된 조직체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장을 위한, 시

장에 의한, 시장의 조직이어야 한다. 자금이나 기술이나 생산은 마케팅을 위해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의 조직

셋째, 제품의 개발주관부서가 R&D와 기술부서로부터 제품계획부나 시장조사 매니저로 되어야 한다. 왕왕 가공과정이 어렵고 다양할수록 제품개발부서가 R&D와 기술부서 중심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칫 고객의 소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때 CEO의 냉철무쌍한 잣대가 필요하다.

넷째, 제품의 뜻도 어떤 기능의 물적, 기술적 속성의 합(合)이 아니라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가치창출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조직에 스며 있어야 한다. 간단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명쾌하지 않아서 기업몰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섯째, 품질 역시 마찬가지다. 물적, 기술적 가치보다 용도의 적합성 내지는 기대와 만족의 일치가 우선한다. 하루에도 수십가지 신제품을 개발하며 한두 가지만을 시장에 선보였다가 그것조차 포말처럼 스러지는 수많은 휴대폰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품이며 품질인가.

과잉 기능과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그것들이 불필요한 대다수 소비자에게 댓가를 전가시키는 휴대폰 공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돈버는 게 어려운 줄 모르고 돈 쓰는데 만 이골이 난 철부지 10대들을 유혹하는 것이 고객만족인가.

유상감자 한도

Q 현재 미국이 본사를 두고 있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본금은 140억
 2. 자본잉여금(주발초) 422억
 3. 자본조정(감자차손) 421억
 4. 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 206억
 5.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4930억
- 질의사항)

1. 유상감자를 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유상감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유상감자 한도)

A 이익잉여금의 90%정도를 이익배당성격의 유상감자 가능할듯함-더 민감내용은 증권사와 담당변호사
자문하세요

식비 비과세

Q 2023년부터 급여 비과세 항목중 식비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당사에서는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어 기존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상제공되는 식비가 식비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만큼 비과세 적용이 가
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현재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며, 20
만원 증액은 아직 확정 공포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화 채권회수

Q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중국의 관계회사에서 당사에 채권에 대해
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대만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당사의 채권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1. 당사와 중국의 관계회사 간의 매출 거래 발생, 당사에서 약 \$2,000,000의 매출채권 발생
2. 중국의 관계회사(A)에서 당사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3. 중국의 관계회사(A)와 대만의 관계회사(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관계회사 B가 관계회사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함.
4. 그래서, 대만관계회사 B가 당사에 \$700,000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당사가 중국 관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일정부분 채권 금액을 대만의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 특별한 세무 issue가 있는지요...?
2. 세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귀사가 매출거래처가 아닌 매출거래처의 관계사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Q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장기렌트로 중형 승용차와 금융리스로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장기렌트(3년)중인 중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2. 금융리스(5년)중인 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역시 임차료의 70%가 아닌지요?

A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거래가액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재화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상품이나 제품, 원자재 등 구체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또한 해당 재화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으므로 거래시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당사자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도 공급자는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사용·소비하는 시점, 장기할부판매나 완성도 지급기준조건·중간지급조건 등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가액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적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급받는 자와 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우선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미발행 및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가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종결되면, 처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일 또는 법원판결일

을 작성일로 하여 최초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과의 차액만큼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서삼46015-10818, 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완료 되고 공급가액 확정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이 공급되고 해당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역무의 제공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나 또는 소송결과를 기다렸다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하지만 용역공급자가 합의된 거래가액이 아닌 잠정가액으로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추후 잠정된 가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툼이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변경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판결로 변경되면 최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가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합의일이나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세법개정

	현행	개정
증권거래세 인하	0.25%	0.25% → 0.23%('21년) 0.23% → 0.15%('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3년)	이자 · 배당 ·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 5000만원 해외 ·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 250만원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주요 5개 선진국과 한국의 R&D투자세액공제 개요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공제한도	비고
미국	7	법인세액 75%	기존 일몰제 → 2015년 상시화
일본	6	법인세액 25%	2015년 공제한도 확대
영국	13	없음	2020년 세액공제율 상향
독일	인건비 25, 계약비 15	합산 100만유로	2019년 도입
프랑스	30	1억유로 초과분에 5% 공제율 적용	2008년 세액공제율 상향
한국	2	법인세액 2%	2018년 세액공제율 축소



IRA 하위 규정 관련 정부 요구사항

- 미국 투자 예정 기업,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
- 친환경차 일부만 북미서 조립해도 세액공제 가능
- 광물 조달 관련 FTA체결국 범위에 인니 등 포함
- 세액공제 상업용 차량에 렌트카 · 단기리스차 포함



말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진다

1. 입을 다물어라.

인간과 동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불의를 바로 잡는데 써 왔는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 줄 좋은 말이 없거든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2. 화제를 돌려라.

힘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쪽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 대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스포츠, 날씨 등 안전하고 흥미로운 화제로 바꾸어라. 힘담이 시작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면 상대방은 힘담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할 것이다.

3. 믿지마라.

법정에서 증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검사가 교묘하게 유도했을 때, 배심원들은 지금 들은 말을 무시하라는 판사의 요청에도 쉽게 그 말을 지우지 못 한다. 그 말은 이미 배심원들의 뇌리에 또렷하게 새겨졌기 때문이다. 들은 사실을 믿지 않기란 어렵다. 하지만 힘담을 들었다면 믿지 말라. 힘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4. 용서하는 방법을 개발하라.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장관들 때문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면 그 사람들 앞으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편지를 쓰곤 했다. 그리고는 편지를 부치기 직전에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 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분노와 증오를 극복해라.

5. 충동을 이겨내라.

힘담하고 싶은 욕망을 이겨 낼 때마다 자기를 칭찬하고 부정적인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을 다잡아라. 물론 힘담하지 않는다고 박수를 쳐 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세상을 바꾸자, 한 번에 한 마디씩.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일정조건 성취시 반환의무가 있는 지분이라도
일단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임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서면법규소득-4441, 2022.05.25

질 의

-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해제 조건부로 수령한 쟁점의 수입시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8, 2022.5.24.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으로서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등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지분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인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16, 2022.02.25

질 의

-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B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회 신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 2020.02.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65, 2022.03.22

질 의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사전법규소득-537, 2022.05.17

질 의

- ○질의인은 '@@@년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 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000주)을 입고 받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등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특례적용이 가능

○이후 질의인은 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주식 일부(000주)를 행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6의4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 '00.0. 착오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아닌 주식(이하 '일반주식')을 취득함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 위반하는 경우에

[쟁점①] 조세특례제한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세특례제한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05.11.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전달받아야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달돼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된다.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우 올해 추가로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면 안 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 유예’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적용

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 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이라도 보유기간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집에서 산지 1년이 지나서 추가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디민,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할 수 있고, 3개부터는 적용 불가하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2. 1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 23. 1. 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신청 방법
11월 30일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 *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3】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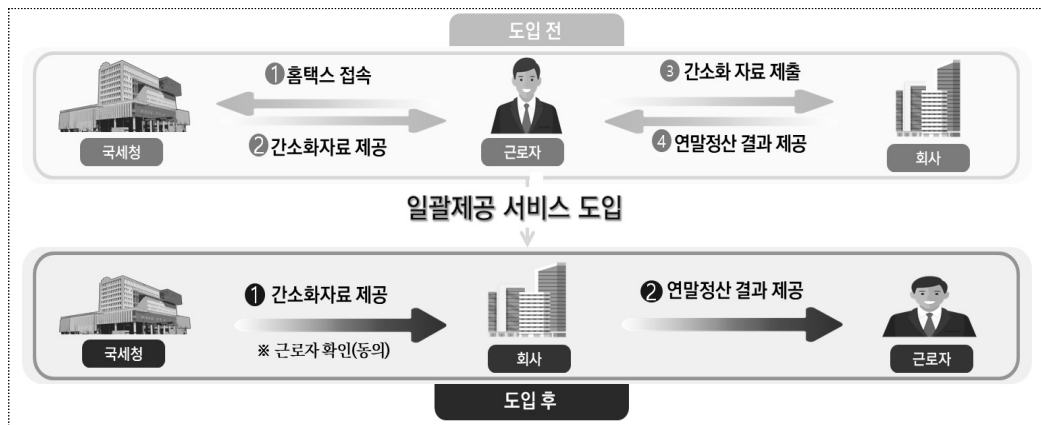
【참고4】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개요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고도화

- (신청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도록 이용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청 편의 제공
 - * (종전) 신청서 제출 → 홈택스 확인 (개선) 홈택스 확인만으로 신청 완료
- (제공회사 확대)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

● 이용 절차

- ① (회사 신청)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11. 30.)
 - * 부득이한 경우 '23. 1. 14.까지 근로자 명단 수정 또는 추가 등록 가능
- ②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을 진행(12. 1. ~ 1. 19.)
- ③ (자료 내려받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기(1. 21. ~ 3. 10.)

참고 2 - 회사 신청 방법(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 ②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 정보, 비밀번호, 세무대리인 제공 동의 여부 입력 후 저장
- ③ 두가지 제출 방법(직접입력, 엑셀파일) 중에 선택
 - ㉠ 직접입력 제출: 신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자료 추가하여 제출
 - ㉡ 엑셀파일 제출: 엑셀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엑셀자료 올리기 제출

참고 3 -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 선택
- ②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절차 이행여부 등 확인 가능 → 근로자 개인별, 근로자 전체로도 조회 가능

참고 4 -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연말정산 대행업체에게 위임한 경우-

● 신청순서

- 1단계: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 2단계: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 3단계: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총괄부서 사용자 및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승인



● 1단계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총괄 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 ①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선택
- ② 부서사용자ID 신청화면에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선택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 선택
- ④ 신청자와 일괄제공 도입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아이디 신청하기 선택

● 2단계 :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ID 신청하기

- ① 연말정산 대행업체가 홈택스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선택
- ② 부서사용자ID 신청화면에서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ID 신청하기」 선택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다음 선택
- ④ 신청자와 일괄제공 도입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아이디 신청하기 선택

● 3단계 :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총괄부서 사용자 및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승인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My 홈택스 > 부서사용자 관리

- ①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회사가 홈택스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선택
- ② 「My 홈택스」 화면 우측 상단의 「부서사용자 관리」 선택
- ③ 승인하고자 하는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 또는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선택
- ④ 사용자 아이디 상태를 “미승인” → “사용” 으로 변경 후 저장하면 승인 완료

참고 5 - 도움 자료 안내

● 제도 안내자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홍보 리플릿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참고자료실

● 유튜브 동영상 설명자료

- (내용)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 개요 및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본 청 실무자가 알기 쉽게 설명

* 국세청 유튜브 영상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검색

[경로 1] 국세청 누리집 상단의 “유튜브 버튼” 클릭

[경로 2] 국세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바로가기” 클릭

- (주제 구성) 피피티(PPT)를 활용한 주요 내용 주제별 구성

구 분	요 약	설 명
[chapter 1]	간소화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부터 연혁까지 모든것
[chapter 2]	일괄제공 신청 절차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사·근로자별 이용 필수 절차 안내
[chapter 3]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회사의 사전 준비와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chapter 4]	주요 질의 및 응답	이것만은 알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핵심 질문과 답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1일 (금)	11월 14일 (월)	11월 15일 (화)	11월 16일 (수)	11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370.10	1334.10	1320.30	1322.40	1325.60
일 본 엔 (JPY)	966.39	954.74	942.84	950.31	950.80
영 국 파 운 드 (GBP)	1601.78	1572.17	1551.68	1567.31	1579.45
캐 나 다 달 러 (CAD)	1026.91	1004.25	991.63	995.78	994.30
홍 콩 달 러 (HKD)	174.65	170.21	168.52	169.12	169.42
위 안 화 (CNH)	188.87	186.43	187.67	187.62	187.62
유 로 화 (EUR)	1396.68	1376.39	1363.08	1367.31	1377.83
호 주 달 러 (AUD)	904.68	891.18	884.34	893.35	893.39
싱 가 폴 달 러 (SGD)	990.21	971.07	961.86	964.48	967.5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1.48	288.30	287.26	291.44	291.66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자료

- 국세청, 2022. 1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배제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증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불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세대상		참고법령
주택		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토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01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02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 60%
 - 법인주택 : [전국합산 {공시가격 × (1 - 감면율)}] × 60%(기본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 $[\text{전국합산} \{ \text{공시가격} \times (1 - \text{감면율}) \} - 80\text{억 원}] \times 100\%$

✓ 서울

● 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6억 원 이하	0.8%
12억 원 이하	1.2%
50억 원 이하	1.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 주택(3주택이상 등)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2.2%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 법인 주택 : (일반) 3%, (3주택 이상 등) 6%

●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45억 원 이하	2%
45억 원 초과	3%

●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

✓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지방세법 § 112①2호는 제외, 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 (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8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령별 공제율 :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2항 1호, 시행령 § 3)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 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국 1호 이상	5년이상 ³⁾ 10년이상
건설임대 ²⁾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m ² 이하	6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이상 ³⁾ 10년이상
기존임대 ⁴⁾	국민주택규모 ⁵⁾ 이하	3억 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m ² 이하	9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m ² 이하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m ² 이하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년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18.2.13.개정)

4)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85m²(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이하)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8②2호, 시행령 § 4)

-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 ②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 ③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16.6.2.~'17.6.1. 이전	○	×	×	×	×
	'17.6.2.~'18.6.1. 이전	○	○	×	×	×
	'18.6.2.~'19.6.1. 이전	○	○	○	×	×
	'19.6.2.~'20.6.1. 이전	○	○	○	○	×
	'20.6.2.~'21.6.1. 이전	○	○	○	○	○

- ④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치단체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 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 ⑥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⑦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 ⑧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⑩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 ⑪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⑫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⑬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 18.2.13.개정)
- 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⑮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
 -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 재산세(지방세) 서울

● 주택(9억이하 1세대1주택-0.0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이하	0.1%	-
1.5억이하	0.15%	3만원
3억이하	0.25%	18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이하	0.2%	-
1억이하	0.3%	5만원
1억초과	0.5%	25만원

●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이하	0.2%	-
10억이하	0.3%	20만원
10억초과	0.4%	120만원

지방세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 2022. 11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2.11.15.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6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 · 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 신청 ·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고액 ·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다.
 -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1. 18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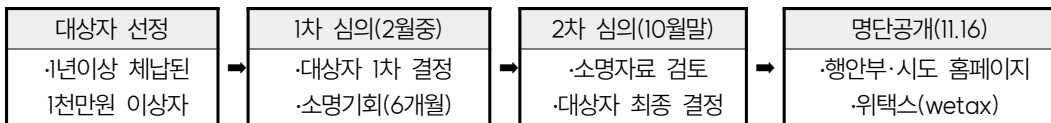
-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고액상습체납자 입국시 휴대물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이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의 적극 활용과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주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국 합산된 체납액 공개

- ※ '21년부터 광역 합산'22년부터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대상에 포함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참고 2 - '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2. 11. 15.(화) 18:00 기준

<지방세>

①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합계	인원	10,330	2,835	7,495	894	132	762
	체납액	453,094	133,442	319,652	58,169	20,165	38,004
1천만초과 ~ 3천만이하	인원	7,295	1,893	5,402	511	56	455
	체납액	129,147	33,708	95,439	8,543	990	7,553
3천만초과 ~ 5천만이하	인원	1,357	398	959	160	25	135
	체납액	51,811	15,371	36,440	6,236	966	5,270
5천만초과 ~ 1억이하	인원	1,008	322	686	127	23	104
	체납액	69,351	22,056	47,295	9,053	1,605	7,448
1억 초과 ~ 3억 이하	인원	561	181	380	72	19	53
	체납액	88,108	29,522	58,586	11,752	2,842	8,910



3억 초과 ~ 5억 이하	인원	50	18	32	14	4	10
	체납액	18,829	6,633	12,196	5,224	1,507	3,717
5억 초과 ~ 10억 이하	인원	40	16	24	4	1	3
	체납액	28,244	12,045	16,199	2,819	596	2,223
10억 초과	인원	19	7	12	6	4	2
	체납액	67,604	14,107	53,497	14,542	11,659	2,883

②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7,495	366	1,399	2,446	2,260	757	267
	금액	319,652	13,733	80,805	100,386	83,927	31,472	9,329
지방행 정제재 · 부과금	인원	762	41	83	231	258	108	41
	금액	38,004	1,320	3,054	13,338	13,384	5,004	1,904

참고 3 - '22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2. 11. 15.(화) 18:00 기준

①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0,330	453,094	2,835	133,442	7,495	319,652
서울	2,774	144,422	574	35,987	2,200	108,435
부산	629	20,872	125	6,287	504	14,585
대구	328	9,458	84	3,129	244	6,329
인천	465	19,638	96	4,728	369	14,910
광주	225	8,687	78	2,252	147	6,435
대전	254	7,699	66	2,698	188	5,001
울산	209	7,376	79	3,406	130	3,970
세종	56	1,571	26	563	30	1,008
경기	2,433	123,257	668	30,111	1,765	93,146

강원	219	10,126	46	3,619	173	6,507
충북	334	12,049	146	5,309	188	6,740
충남	609	22,065	264	12,532	345	9,533
전북	272	9,762	118	4,471	154	5,291
전남	248	7,653	114	3,908	134	3,745
경북	480	15,160	150	6,232	330	8,928
경남	584	23,660	160	6,673	424	16,987
제주	211	9,639	41	1,537	170	8,102

②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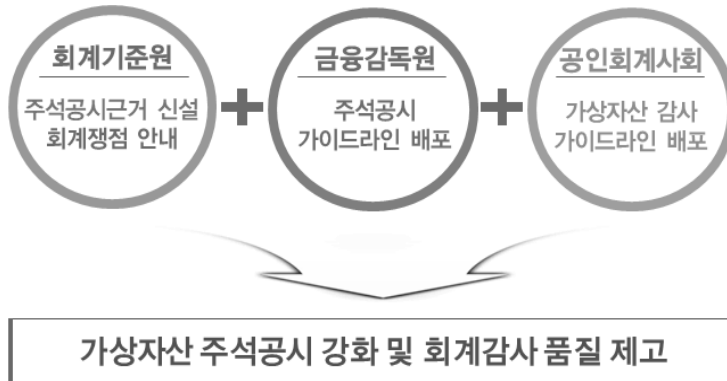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94	58,169	132	20,165	762	38,004
서울	135	5,472	16	794	119	4,678
부산	42	2,380	3	237	39	2,143
대구	0	0	0	0	0	0
인천	21	1,452	2	134	19	1,318
광주	45	1,322	9	389	36	933
대전	0	0	0	0	0	0
울산	12	590	3	119	9	471
세종	0	0	0	0	0	0
경기	386	36,032	56	15,952	330	20,080
강원	18	381	3	73	15	308
충북	30	738	5	136	25	602
충남	35	1,102	5	172	30	930
전북	27	760	3	178	24	582
전남	7	609	1	72	6	537
경북	50	1,689	7	208	43	1,481
경남	71	4,917	14	1,506	57	3,411
제주	15	725	5	195	10	530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2022. 1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정 및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향후 금융위 협의, 세미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 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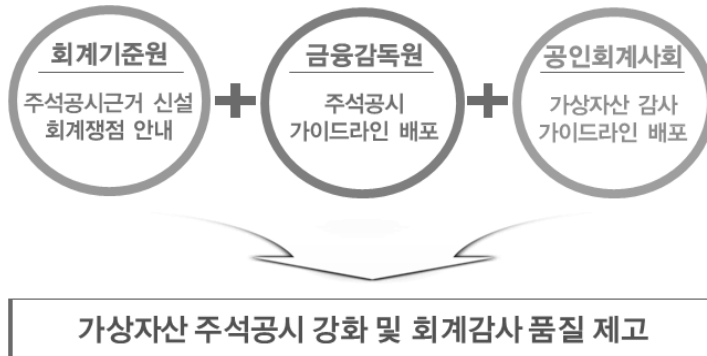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경과

-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新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
 -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
-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2 간담회 논의결과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



- (정보이용자 측면)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의무화)
-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 신설(회계기준원)
 -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금융감독원)

**(참고) 주식공시 필요사항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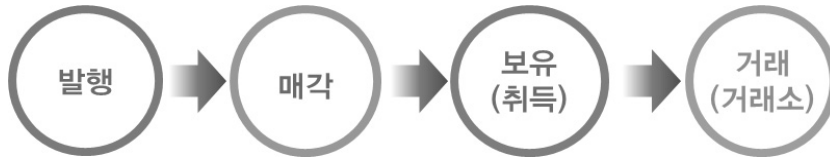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
 - *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
 - (개발사)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
 - * 가상자산의 사용 용도, 개발된 가상자산의 총 수량, 개발사 보유 수량 등
 - (보유자)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
-
- (회계처리 측면)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회계기준원)
 - ※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고려
 - (회계감사 측면)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공인회계사회)
 - *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3 향후 일정

-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금감원, 기준원, 한공회)('22.12.28.) 등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
 -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
 -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식 공시 모범사례 배포

붙임 1 -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및 회계 이슈


- 가상자산은 크게 ①개발·발행(발행사), ②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③취득(보유자), ④시장거래(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 발생



〈가상자산 거래별 핵심 판단사항 및 회계이슈(요약)〉

단계	핵심 판단사항	국내 현황	제기되는 회계이슈
발행	개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으로 인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	통상의 무형자산과 다르므로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기준서 제·개정 필요)
매각	매각대금의 수익인식을 위한 계약상 수행의무* 완료 여부 * 수행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매각계약상 의무 vs 백서상 의무) 여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이연 다만, 발행사의 수행의무의 범위, 이행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가상자산의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폼의 안정화 및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백서 등의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 다만, 수행의무 범위 등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행사가 직접 주석공시로 제공할 필요(▶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보유 (취득)	재고자산(영업목적) 또는 무형자산 분류의 적정성 여부	중개 목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상승은 불인정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은 공정가치 평가로 가치상승 재무제표 반영 필요 (▶기준서 제·개정 필요) 보유 가상자산 현황(보유목적, 규모 등)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p>고객위탁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p> <p>* 가상자산 암호를 거래소가 보유하고, 해킹 등의 발생시 거래소 책임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식 필요 주장</p>	<p>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인식</p> <p>※ IFRS는 자산의 통제권을 기준으로 자산인식 여부 결정</p> <p>아울러, 위탁된 가상자산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p>	<p>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위험과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 제기</p> <p>※ 일본('18.3월)과 미국('22.3월)은 거래소 자산과 부채로 인식</p> <p>위탁자산의 주식정보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고 강화할 필요</p> <p>(▶주석 요구사항에 반영)</p>
---	---	--	---

붙임 2 - 가상자산 관련 주식공시 이슈

□ 별도의 주식공시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큼
- 또한, 주식공시 기피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식공시 의무화*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기준서에 주식공시 근거를 신설할 필요
 - * 기준서상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공시만 가능

□ 개발 및 발행(매각) 관련

- 플랫폼 구축 등 발행사의 의무범위와 이행정도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나 수익 인식 등에 영향을 미쳐 관련 정보제공이 중요
 - 매각한 경우 매각대가, 수익인식 여부 등의 정보도 제공
- 개발사 보유 가상자산은 총발행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수량(변화), 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

□ 보유

- 투자자 등의 경우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목적 및 경로, 금액규모, 시장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가상자산 사업자

-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해킹 등 발생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

- 위탁 가상자산의 금액, 수량 정보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등을 공시

붙임 3 - 가상자산 관련 외부감사 이슈

- ☐ 감사인의 적격성
 - 감사인 구성원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여부
 - 내·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여부, 블록체인 검증 및 가상자산 평가에 필요한 기술 또는 감사 도구 활용 가능성 등 평가 필요
- ☐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
 - 내부통제 평가와 아울러 신뢰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 보유량과 블록체인상 기록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실재성 파악을 위해서는 개인키(회사 단독) 보유 확인이 중요하며, 제3자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외부조회도 병행 고려
- ☐ 발생사실과 완전성
 - 가상자산 매각거래 관련 발생사실 관련 정보 검증이 필요
 - 가상자산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증감분석, 기말과 기초리스트 비교,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 인식 여부(예, 무상 등) 등 확인 필요
- ☐ 가상자산 발행기업 감사 시 고려사항
 - 발행기업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 등 수익인식 회계정책을 평가하고 노드 생성 전 발행 자산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절차 수행
- ☐ 가상자산 사업자 감사 시 고려사항
 - 고객 위탁 보유분과 자체 소유분과의 구분 관리 및 고객 위탁분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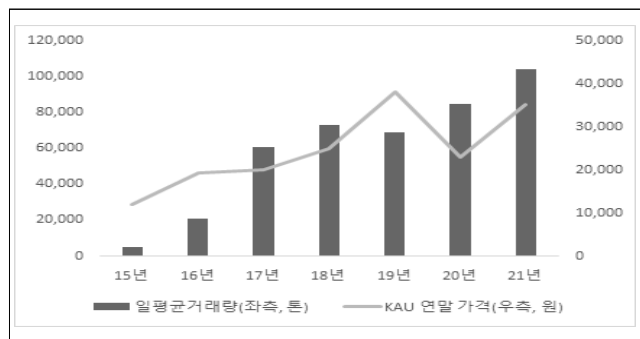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2022. 11

1 개 요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판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
 - * '18년 총배출량 대비 '30년 총배출량 △40% 감축 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 9월)에 따르면 3차 이행기간('21~'25년) 동안 총배출권의 10% 이상은 유상으로 할당*될 예정
 - * 1차 이행기간('15~'17년) 전량 무상, 2차 이행기간('18~'20년) 3% 유상
- 배출권 시장을 통한 거래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 등 재무공시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연도	일평균거래량(톤)	KAU연말가격(원)
'15년	5,133	12,000
'16년	20,763	19,300
'17년	60,634	20,000
'18년	73,074	25,000
'19년	68,940	38,100
'20년	84,492	23,000
'21년	104,313	35,100



출처: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2021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시세조회('15~'21)

- 상장법인은 배출권 거래를 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이 없어, 국내 일반기준(K-GAAP)을 준용 또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1. 4. 9.) 배출권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안내

(참고) K-GAAP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주석기재 사항

가. 배출권

-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의 수량
- (2)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 (3)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

나. 배출부채

- (1)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 (2) 보고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2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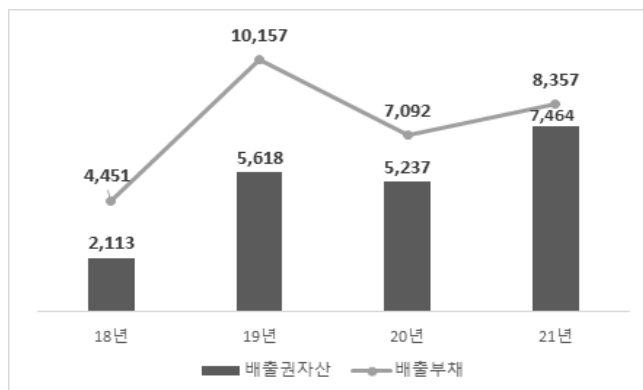
- ◆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21년 할당량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부채 규모는 유상할당 증가(3% > 10%)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증가
['21년 배출권자산 7,464억원(+42.5%), '21년 배출부채 8,357억원(+17.8%)]
- ◆ 상위 30사 중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한 기업은 모두 16사이며, K-GAAP 주석요구사항(4개 항목)을 모두 공시한 기업은 12사(전기 6사)로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재무공시 수준은 향상

- (자산·부채 현황) 점검대상 상장법인(30사)의 '21년말 배출권자산은 7,464억원이고, 배출부채는 8,357억원임
- 해당 자산·부채는 유상할당 증가(3%→10%)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각각 2,227억원(+42.5%) 및 1,265억원(+17.8%) 증가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 배출권자산 및 배출부채 현황(연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배출권 자산	배출 부채	합계
2018년	2,113	4,451	6,564
2019년	5,618	10,157	15,775
2020년	5,237	7,092	12,329
2021년	7,464	8,357	15,821





- (회계정책) 점검대상 상장법인(30사) 중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음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회사는 26사(전체의 86.7%)
- K-GAAP을 준용한 상장법인(26사) 중 16사(전체의 53.3%)는 지난해 발표된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공시

- (주석공시)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

* 항목별 주석 기재 회사 수(전기 대비 증감):

- ① 무상할당수량 25사(+13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23사(+12사), ③ 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 18사(+8사), ④ 배출량추정치 21사(+8사)

〈상장법인(할당량 상위 30사)의 주석공시 현황(연결기준)〉

구 분	20년		21년		증감	①~④ 모두 공시		
	공시	미공시1)	공시	미공시1)		20년	21년	증감
① 무상할당수량	12사	18사	25사	5사	+13사	6사	12사	+6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11사	19사	23사	7사	+12사	①~④ 모두 미공시		
③ 배출권자산·부채 증감내역	10사	20사	18사	12사	+8사			
④ 배출량추정치	13사	17사	21사	9사	+8사			
						20년	21년	증감
						12사	5사	△7사

주: 1) 관련 주석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시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① 배출권 관련 충실한 재무공시(재무제표 주석) 유도

- 다수의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고 있어, 정보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
- 배출권 관련 공시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모범사례*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
- * 금감원 보도자료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1.4.9.)' 참조

②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파악

-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 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

참고 1 - 온실가스배출권 개요

- (기후변화협약) '15.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체제가 출범하여, '21.1월부터 시행 중
 - *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oC 이내로 제한하되, 가능한 한 1.5o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20.10월)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축소 등을 이행 중
 - * (목표)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純배출량(CO2 배출량 - 흡수량)을 0으로 만들
- (배출권 거래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등(배출권거래법)
 - ** '21년부터 총할당량의 10%를 경매절차를 통해 유상할당
-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참고 2 -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해외사례

- IFRS를 적용하는 유럽과 US-GAAP을 적용하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철강, 석유화학, 전력)에 속한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재무공시 사례(유럽 5사, 미국 6사)를 살펴본 결과
 - IFRS를 적용하는 유럽기업(5사)은 모두 배출권 회계정책을 기재하고 있고, 일부(3사)는 관련 자산·부채금액을 주석으로 기재
 - US-GAAP을 적용하는 미국기업(6사)은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금액과 회계정책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없고, 일부(2사)가 계정과목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수준
 - IFRS 및 US-GAAP 모두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및 공시 기준은 없지만,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재무공시 수준이 다소 양호



〈해외 주요기업 재무공시 현황〉

구 분		회계기준	업종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회계정책	주석정보
유럽 (5사)	A사	IFRS	철강	공시	배출권 자산 금액 공시
	B사	IFRS	석유화학	공시	미공시
	C사	IFRS	석유화학	공시	배출권 자산·부채 금액 공시
	D사	IFRS	전력	공시	배출권 자산 금액 공시
	E사	IFRS	전력	공시	미공시
미국 (6사)	F사	US-GAAP	철강	미공시	미공시
	G사	US-GAAP	철강	미공시	미공시
	H사	US-GAAP	석유화학	미공시	미공시
	I사	US-GAAP	석유화학	미공시	미공시
	J사	US-GAAP	전력	공시	미공시
	K사	US-GAAP	전력	공시	미공시

⇒ (평가)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법인도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15년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K-GAAP의 배출권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정책, 자산·부채 증감내역을 포함해 무상할당량·배출량추정치 등 비재무정보도 함께 공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공시 수준은 양호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 금융감독원, 2022. 11

주요 내용

- ◆ (지정 본통지)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10.14일)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개선(9.29일 시행)된 지정제도의 영향으로 재지정 요청이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 * '21년(10차) 371사 → '22년(10차) 167사, △ 204사 감소
- ◆ (의견청취)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10.24.~28일)*를 실시하고
 - * 사전통지된 상장사 중 자산규모별로 156사를 선정
 -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11.8일)하여 新외감법의 도입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건의 및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향후계획)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

감사인 지정실시

- (지정 본통지)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22.10.14.)를 실시한 후



-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1,469사)
 - 사전통지 실시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대비(371사) 대폭 감소
 - 9.29일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른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재지정 제한,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 제도개선 영향
 - * 회사와 감사인의 지정군(群) 분류기준 개선 : 지정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의 범위를 확대(5조이상→2조이상)하는 한편,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사인群의 분류기준을 강화
 - 신뢰감법下 지정제 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데 기인
 -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발표('21.10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현황〉

(단위 : 사)

구 분	'21.10차	'22.10차	증감
	회사수(비중)	회사수(비중)	회사수(율)
상향 재지정	40 (11%)	20 (12%)	△20(△50%)
하향 재지정	277 (75%)	72 (43%)	△205(△74%)
동일군 재지정	- (-%)	36 (22%)	36 (100%)
독립성훼손	31 (8%)	28 (17%)	△3(△10%)
연결일치 등	23 (6%)	11 (7%)	△12(△52%)
합계	371(100%)	167(100%)	△204(△55%)

※ 12월 결산 상장사에 대한 대규모 지정이 실시되는 10월 사전통지 관련 재지정요청건 분석

2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청취

가.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배경) 사전통지 후 지정회사 대상으로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수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개요

- ☒ 기 간 : '22.10.24.~'22.10.28.
- ☒ 대 상 : '22.10월 사전통지된 상장사(코넥스제외) 1,051사 중 156사(응답률: 58.3%)
- ☒ 질문내용 :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감사보수, 감사수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업부담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등

- ☐ (조사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를 지적하였고

-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한 반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
- 또한, 지정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한편,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약의 난항 등 갈등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중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및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나.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최배경)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평가 및 제언을 청취

신외감법 도입효과 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요

- ☑ 일 시 : '22. 11. 8.
- ☑ 참석자 : 외국계IB(3명), 국내연기금(2명), 신용평가사(1명)
- ☑ 주요내용 : 新외감법 도입효과, 한국기업의 재무공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

- (참석자 의견) 참석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유니크(Unique)한 제도이지만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 해외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매우 중시하여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3 향후 계획

가. 지정감사 계약체결 적극 지원

-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협약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 * 지정된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시 추가기간(통상 2주 내외)을 부여할 예정

나. 과도한 보수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엄정대응

- 과도한 지정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을 우선 취소할 예정

[참고1]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 ①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6)
 -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능
- ②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7192~5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가능

다. 모범규준 & 부당행위 신고방법 안내강화

- 지정회사의 계약·업무절차, 신고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본지정 통지시 모범규준과 부당행위 신고·상담절차의 주요내용도 함께 안내
 - 아직 지정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품질 관련 개선내용*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지정감사 품질 등에 대한 불만과 지정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상담·신고방법 안내를 강화
 - * ① 품질관리인력 확충('23.3월말), ② 감사인감리 결과 반영('23.10월), ③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 반영('23.10월)

[참고2] 모범규준 주요내용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라. 제도개선 지속추진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 이외에 지정제도 집행기관으로서 지정사유, 지정방식 및 재지정절차 등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 지정사유 축소, 지정기간 단축, 시간당보수 관련 불만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개선의견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에 전달하여 논의예정
 - *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주요 논의과제 : ① 표준감사시간,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③ 주기적지정 등 지정확대)
 - 앞으로도 기업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한없는 불만접수 및 제도개선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면담 및 간담회를 수시개최할 예정